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26호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예고

####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조).

나. 불법촬영 근절·예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불법촬영 근절·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cmdjyou@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4. 제정 조례안 : 붙임

##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민간건물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특별관리구역(역·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계획
3. 대전광역시, 자치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교육)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